

# “후분양제 전면도입, 정부·여당 소극적”

### 정동영 의원,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라며 미루고 미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 기득권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택시장의 비정상상을 정상화하는 개혁과제를 주저함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에서 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법안 심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에 도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주장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장기 과제라 주장한다”며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미루고 미루면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는 전면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전주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미련해줬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전 재산을 들여 구입한 집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의 문제로 하자 발생한다면



“엄지 척”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구(왼쪽부터)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민석 민주연구위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반문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위해 불사조포럼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

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분양제 의무화가 주택분양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마련, 소비자선택권 보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LH공사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했을 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지만, 선분양에 수반되는 견본주택 건설비용, 부지임차료, 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건설업체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최영규, 무형문화재 지원방안 마련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사진) 의원이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이들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최영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그동안 무형문화재 역량강화와 자금심 고취 그리고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 전승활동 지원과 전수시설 개선 지원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도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보유자에게 90만원, 보유단체에게는 7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자 100만원, 보유단체 중 보유자가 있을 경우 30만원 인상된 100만원, 보유자가 없을 경우 80만원으로 지원된다.

특히, 노후화된 전수시설에 대해 시설개선과 필수기자재 구입 경비를 지원해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도내 무형문화재 83건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총 1억5,000만원, 건당 1,0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도 무형문화재 활성화 워크숍 2,000만원,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및 공동사업 3,000만원, 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5,000만원 등이다.

도 무형문화재 활성화 워크숍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존회장, 전수교육교과, 이수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회와 전수기법 체득, 인문학강좌 개최, 보유자 경험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또한, 도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합동전시와 실질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 개최된다.

최영규 의원은 “도 무형문화재 자금심 고취와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도 무형문화재 역량강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권순일, 부동산투기·위장전입 의혹에 “그런적 없다” 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사진)가 처가 위장전입, 경기 화성 땅 투기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장전입과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후보자를 향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격을 낮추거나 실거래가 아닌 취득세, 등록세를 낸 적 있지 않나” “주민등록이 다른 적이 있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권 후보자는 이에 “그런 적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安 ‘통합 승부수’... 당내 강력한 반발 쏟아져나와

### 박지원 “사당화·독재적 발상”... 정동영 “박정희도 유신독재 투표”... 최경환 “꼭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 통합론을 두고 자신의 재신임을 거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을 불모로 더 이상 분열의 계임을 하지 말라. 호남 중진들의 거취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을 나가라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사당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통합 반대 노력을 구태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가슴스러운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의원은 박주선 부의장실에서 일부 호남 중진들과 긴급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신헌법 때 유신독재를 정당

화하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찬반투표를 했다”며 “90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해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는데 독재자들 수법이다. 이젠 당 내에서 ‘골목 독재자’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찬반투표, 정당원투표는 무효”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깨끗하게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의원도 “(정당원투표는) 당헌에도 없는 조치고 기본적으로 의원총회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저절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던진 통합 승부수를 놓고 “안철수 대표의 공작적이고 비민주적인 리더십이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며 “보수 적폐의 빅텐트로 투항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인가. 공작적

정치를 그만 두고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안 대표의 ‘통합 승부수’를 꼭거라고 규정하며 “이런 안하무인, 독선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정문을 통해 “정당원투표제는 정당대회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정당대회만이 당의 해산이나 합당을 의결할 수 있다(당헌 12조, 13조)”며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 대표가 나서서 당헌을 무력화시키는 꼭거”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광주 전남 지방의원들은 통합선언 시 탈당 예고한 상태다. 안 대표가 독 허물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아울러 이날 오후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의 사퇴 촉구 선언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 양오봉, 대통령직속 지역공약 특위 위원 위촉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사진)는 21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및 공약 특별위원회(지역공약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공약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특별 기구이다.

지역공약 특위는 지역과 중앙의 가교 역할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정책의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약특위는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간 상생공약 14개 등 총 144개의 지역공약의 이행 방향 및 전략 논의와 신속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북의 경우 스마트 농생명벨리 육성, 제3의 금융도시 육성 등 8개의 공약과, 전북·전남 상생 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및 전북·경북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이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양오봉 교수는 “전북의 대전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돼 전북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은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다음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